

중국 · 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Review

- I. 중국의 금융시스템
- II. 일본의 금융구조개혁
- III. 동북아 금융협력체제 구축 관련 이슈

2001. 11. 22

한국개발연구원 금융팀

I. 중국의 금융시스템

1. 금융기관의 현황

가. 개 요

- 1978년 12월 공산당 제11기 3中全會에서 채택된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면서 금융제도의 점진적인 개혁에 착수
 - 1979년 개혁·개방 추진 이전 중국의 금융은 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나지 않았고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單一銀行制度(mono-banking system)였음.
 - 1979년 이후 다수의 금융기관이 설립된 데 이어 1984년에는 중국인민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二元的銀行制度(two-tier banking system)로 전환
 -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현대적 금융제도 구축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나. 중국 금융시스템의 발전추이

- 새로운 금융제도의 도입 및 정비 (1979~1983)
 - 1979년부터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과 함께 가장 먼저 추진된 금융개혁 조치는 새로운 금융기관의 설립임
 -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인민건설은행, 중국투자은행 등 특정금융업무를 전담하는 전업은행(specialized bank)이 1979년에서 1981년 중에 신설되거나 중국인민은행 또는 재정부로부터 분리·독립하였음.

- 이러한 전업은행 이외의 새로운 비은행 금융기관*이 설립되었음.

* ① 1979년 10월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많은 신탁투자공사가 설립되었고, ② 1959년 이후 업무를 중단하였던 중국인민보험공사도 1983년 9월부터 국내보험업무를 재개하였으며, ③ 중국농업은행의 감독 하에 농촌부문의 소규모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신용합작사가 설립됨.

□ 새로운 금융제도의 도입 (1984~1993)

- 금융제도가 二元的銀行制度로 전환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

- 1984년 1월에는 中國工商銀行이 설립되어 인민은행의 상업은행 업무를 인수함으로써 중앙은행과 일반상업은행의 기능이 분리

- 이와 함께 일반적인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설립됨으로써 외형상 현재와 같은 금융기관체계가 형성

* 1986년~93년 중 교통은행(1986년 9월 설립)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상업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9개의 주식제 상업은행을 설립

□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정비 (1994~1997)

- 지속적인 개혁 속에서도 전업은행이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보다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문제점이 대두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3개의 정책은행(중국농업개발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전업은행의 정책 금융업무를 담당

- 종전의 전업은행은 국유상업은행으로 전환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998~)

- 국유상업은행의 개혁 및 자율성 확대

- 국유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중국상업은행법상의 자기자본의무비율(8%)을 하회함에 따라 1998년 8월 총 2700억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동자금으로 이들 은행의 자본금 확충
-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점의 폐쇄 및 합병 등 네트워크를 구조조정
- 중국인민은행은 1985년 이후 운용해 오던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관리한도제”를 1998년 1월부터 폐지하고 간접적인 통화량 조절방식으로 전환

<표 1> 중국의 금융기관체계 (1999년 말 현재)

| | |
|-------------|--|
| 중앙은행(1) | 중국인민은행 |
| 정책은행(3) | 중국농업개발은행,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
| 국유상업은행(4) |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
| 주식제은행(10) | 교통은행, 중신실업은행, 중국광대은행, 화하은행, 중국민생은행, 광둥발전은행, 심천발전은행, 조상은행, 복건홍업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
| 지방은행(7480) | 도시상업은행(90), 도시 및 농촌신용합작사(7,390) |
| 외자계은행(177) | 외국은행지점(157), 중외합자은행(7), 외국인 100%출자은행(13) (외국은행주재원 사무소는 248개) |
| 신탁투자회사(238) | 국유신탁투자회사(21), 지방정부소유 신탁투자회사(217) |
| 기 타(85) | 재무공사(70), 리스회사(15) |

자료: 문성민(2001), “중국의 금융개혁 현황과 전망,” 한국은행
The People’s Bank of China, China Financial Outlook 2000

다. 중국 금융기관의 문제점 및 금융체제개혁

□ 금융거래 현황

- 4대 국유상업은행과 3대 정책은행이 보유자산, 수신 및 여신 등 전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함. (<표 2> 참조)

<표 2> 주요 은행권별 자산·부채규모 (1999년말 현재)

(단위: 10억위안)

| | | 자산 | 부채 |
|---------|-----------|--------|---------------------|
| 정 책 은 행 | | 1,540 | 1,469 |
| 국유상업은행 | | 10,400 | 7,620 ¹⁾ |
| 지방은행 | 합자상업은행 | 1,450 | 1,370 |
| | 도시상업은행 | 555 | 530 |
| | 도시신용합작사 | 120 | 121 |
| | 농촌신용합작사 | 1,430 | 923 |
| | 신탁투자회사 | - | - |
| | 금융 및 리스회사 | - | - |

1)은 국유상업은행의 예금만을 합한 수치임

○ 4대 국유상업은행의 자산구조에서 (대출: 유가증권투자: 기타자산)의 비율은 (77: 3: 20)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대출의 약 60~70%가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됨.

• 2001년 1월 인민은행장의 발표에 의하면 2000년말 전국 금융기관의 대출총액은 9.94조위안이고 이중 비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은 48%로 전년대비 2%p가 증가하였으며 2001년말에는 51%로 증가 예상*.

* 인민은행 統計詞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6월말 현재 이미 비국유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51%에 달함. (<표 3> 참조)

• 주식제상업은행의 비국유기업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60%정도이고 농촌 및 도시신용합작사의 同비중은 80%에 달하여 4대 국유상업은행만의 비국유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40%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어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은 60~70%가 될 것으로 파악*됨.

* 중국에서는 소비자대출과 정부의 대금융기관차입이 미미함. 단, 최근에는 소비자대출이 급증하는 추세임.

<표 3> 전국 금융기관의 비국유기업에 대한 대출비중

(단위: 억원, %)

| | 대출총액 | 비국유기업 대출 | 비중 |
|---------|--------|----------|------|
| 1996 | 61157 | 23772 | 38.9 |
| 1997 | 74914 | 30191 | 40.3 |
| 1998 | 86524 | 36187 | 41.8 |
| 1999 | 93734 | 43118 | 46.0 |
| 2000 | 99371 | 47698 | 47.7 |
| 2001. 6 | 106553 | 54342 | 51.0 |

- 은행의 대출패턴은 지역별로 상이하여 경제발전 정도가 높은 동부연안의 省과 市에서는 금융기관의 비국유부문에 대한 대출이 전국평균 수준보다 높음.
- 감소성과 절강성의 경우 2000년말 현재 GDP에서 비국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는데 금융기관의 비국유부문 대출은 65% 이상임.
- 반면, 경제에서 비국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사천성과 호북성의 대비국유부문 금융기관 대출비중은 동년 47%와 38%로 낮음.

□ 국유상업은행의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이유

- 국유상업은행은 대출시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비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
- 자금의 초과수요로 국영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한 상황
- 국유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국유상업은행 지방분점에 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금을 국유기업에 우선 제공

- 이러한 가운데 비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은 부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
- 비국유기업은 소규모 중소기업형 위주인데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늘릴 경우 수많은 기업을 관리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대
-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할 제도가 존재
 - 국유상업은행은 대손충당금제도를 신설한 이후 연간 약 400억위안의 대손충당금적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대손충당금적립이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로 제한되어 있음.
 - 국영기업에 대한 거액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여신심사자에 대한 문책이 없는 반면, 사영기업에 대한 대출은 소액이 부실화되더라도 문책의 사유가 됨.
-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중국 외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국의 실질이자율이 실질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중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재정거래기회(arbitrage opportunity)로 해석되어 중국정부가 이러한 기회를 외국인에게 부여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체제개혁의 내용

- 지금까지 국유상업은행의 개혁은 자산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둠.
 - 1999년 4개의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각각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을 정리
 - 은행장의 성과를 부실채권의 발생과 연계시키고 대출에 있어서 중신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성을 부각

- 지방정부와 결탁하여 신용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국영기업에 대출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분점의 대출심사권을 회수하여 본점에 귀속시킴.
-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개혁에 한계가 있음.
 - 국유상업은행의 소유구조
 - 국유상업은행의 시장지배적 지위
 - 국유상업은행의 관료화* 및 지방화**
 - * 국유상업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은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정부관료로서 은행업무로 행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 국유상업은행의 지방분점은 본점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영업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부실채권을 양산하는데 일조하였음.
 -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의 미분리
 - 금융감독체제의 미비
- 이에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국유상업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금융감독제도에 있어서도 현행의 분업관리체제에서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라.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 금융부문의 개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여러 실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사업영역을 서서히 확대

○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 중국의 금융부문 개방은 1979년 일본수출입은행이 북경주재사무소를 설치한 후 31개의 외은지점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외자은행은 1981년 경제특구인 심천에 난양상업은행(Nanyang Commercial Bank)이 처음으로 허가됨.
- 1982년부터 1989년까지 금융감독규정을 정비하여 금융부문에 대한 해외금융기관으로의 개방이 정형화됨.
- 1991년 9월 국무원은 상해에도 외국금융기관의 영업지점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1992년에는 대련, 천진, 청도, 남경, 영파, 복주, 광주에도 허용
- 1994년 4월 1일부터 “Regulations Governing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효력이 발생하여 중국 금융부문의 개방은 정형화된 관리와 감독의 단계에 들어섬.

○ 외국계 금융기관의 인민폐 업무

- 1996년 12월 인민은행은 상해의 포동지구에서 정해진 요건에 맞는 외국금융기관이 인민폐 업무를 시범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발표
- 1998년 8월 인민폐 업무의 실험이 심천으로 확대되었으며 심천에 진출한 5개의 외국은행이 인민폐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음.
- 1999년 인민은행은 인민폐 업무의 한도를 늘려 총외환부채 대비 인민폐부채 비율이 35%에서 50%로 확대되었으며 7일 이상 은행간 차입에 대한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의 100% 한도를 폐지함. 또한 외국은행의 은행간 인민폐시장참여를 허용하였음.

□ 외국계 금융기관의 현황

- 인민은행의 감독 및 정책의 지원으로 외국금융기관은 그 수와 사업의 관점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룸.
- 1999년 말 현재 23개 시와 해남성에서 영업중인 외국금융기관은 177개로 이중 157개는 외국은행 지점이고 13개는 현지설립은행(6개는 외국인 소유, 7개는 합작투자)이며 7개는 외국금융회사임.
 - 이중 인민폐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은행 수는 상해 19개, 심천 6개 등 총 25개임.
 - 248개의 외국은행의 주재소 사무소가 활동
- 외국은행의 총자산은 317.87억US달러로 중국내 총금융자산의 1.53%를 차지
 - 외국은행의 외환대출금은 218.31억US달러로 중국내 전체 외환대출금의 12.81%를 차지
 - 외국은행의 인민폐자산은 112.38억위안이고 대출금은 67.01억위안, 예금은 54.42억위안임.
- 현재 중국금융시스템에서 외국금융기관이 차지하는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민폐 업무에 대한 외국은행의 지리적 제한과 고객 제한은 철폐될 것임.
 - 다만 중국의 국영상업은행의 비효율적인 업무행태가 개선되고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만 금융이 개방되어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선행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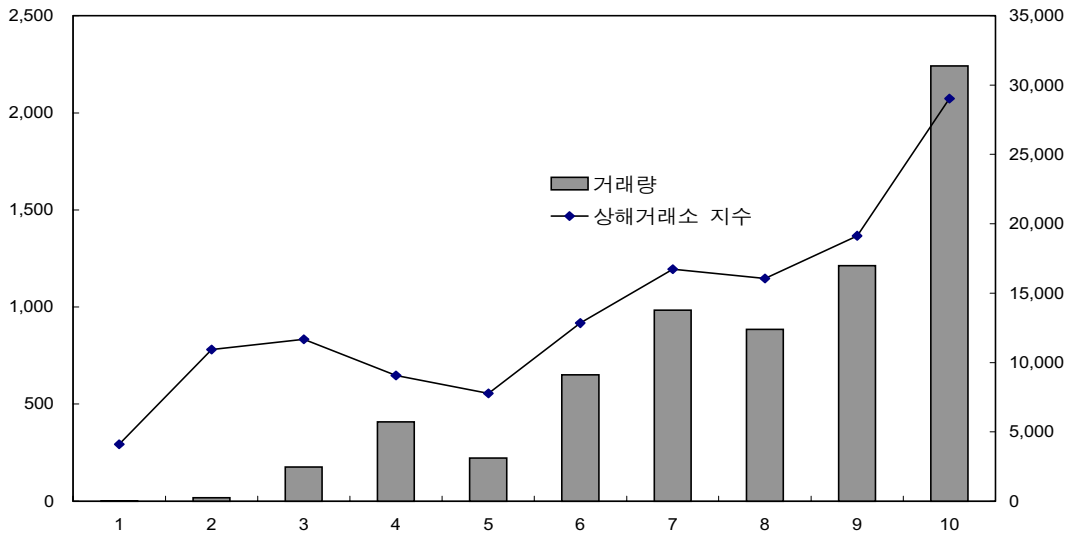
2. 중국 주식시장의 현황

가.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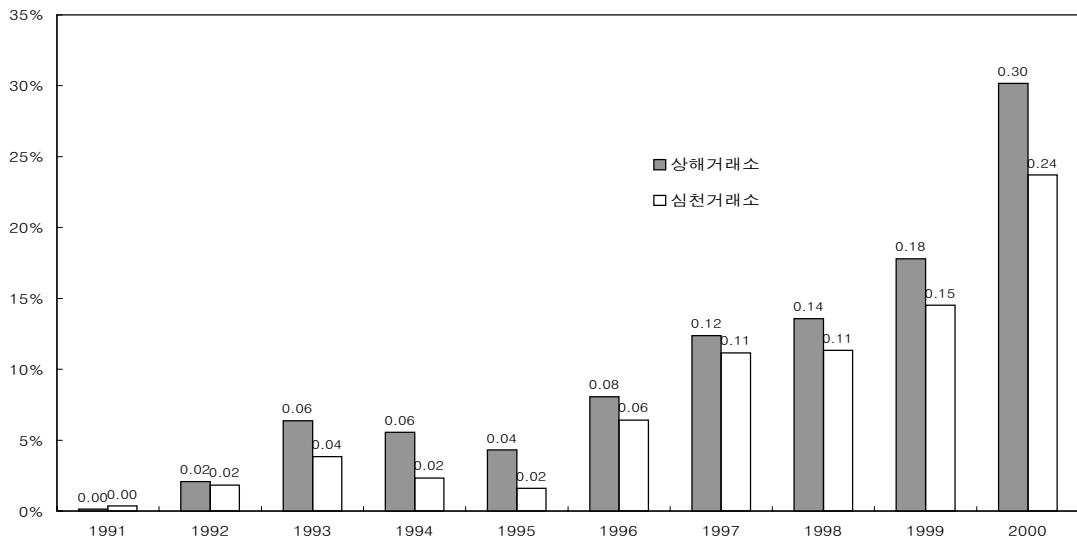
- 1990년 상해증권거래소와 1991년 심천증권거래소가 개장한 이후 중국의 증권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임.
 - 주가지수: 상해증권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SSE Composite Index)는 1990년의 100에서 2000년 말 현재 2073으로 10년간 20배이상의 가격 상승을 시현하였음. ([그림 1]을 참조) 심천증권거래소는 1991년이후 지수(SZSE Composite Index)가 6.6배 상승하였음.
 - 시가총액: 2000년말 현재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각각 2조6931억위안과 2조1160억위안으로 GDP(8조9404억위안)의 30%와 24%에 달함. ([그림 2]을 참조)
 - 거래규모: 2000년중 상해증권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은 3조1374억위안에 달하고 심천증권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은 3조920억위안임.
 - 거래회전율: 최근 3년간 거래회전율은 1.25~1.87이나 전체의 65%에 달하는 국유주와 법인주의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거래회전율은 3.5~5.5로 주식의 평균보유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가 왕성함.
 - 자본조달: 1990년부터 2000년말까지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총액은 상해거래소 2,799억위안, 심천거래소 2,303억위안 등 총 5102억위안임. (연도별 자본조달 규모는 [그림 3] 참조)
 - 투자자구성: 개인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개인투자자는 계좌수의 99.69%, 시가총액의 90.6%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반면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9.4%에 불과함.
 - PER: 2000년 말 현재 P/E ratio는 58.22 (금년11.20일 47.73으로 하락)

[그림 1] 상해증권거래소(SSE)의 주가지수와 연간 거래액

(단위: 억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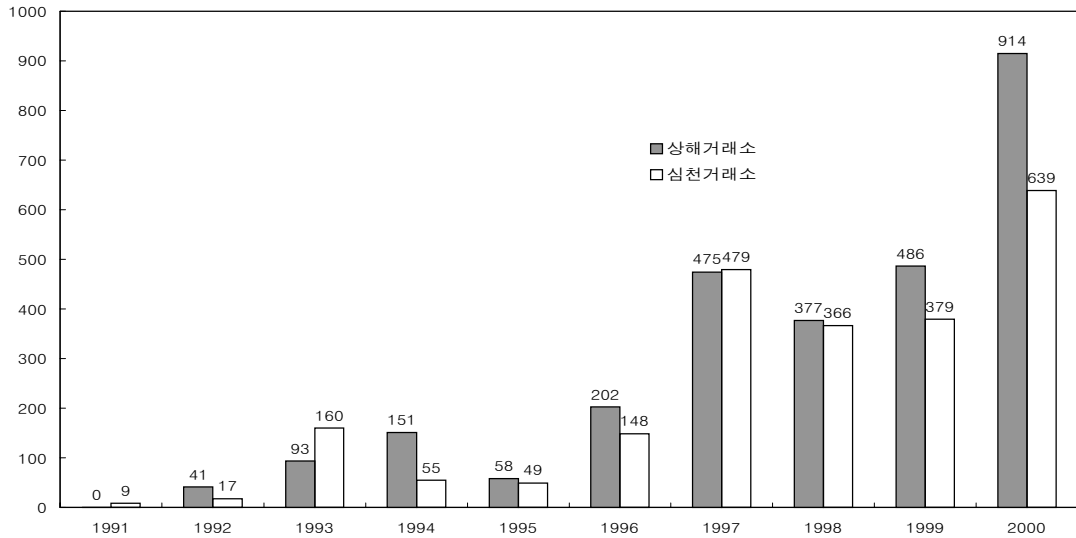


[그림 2] GDP 대비 시가총액비율



[그림 3]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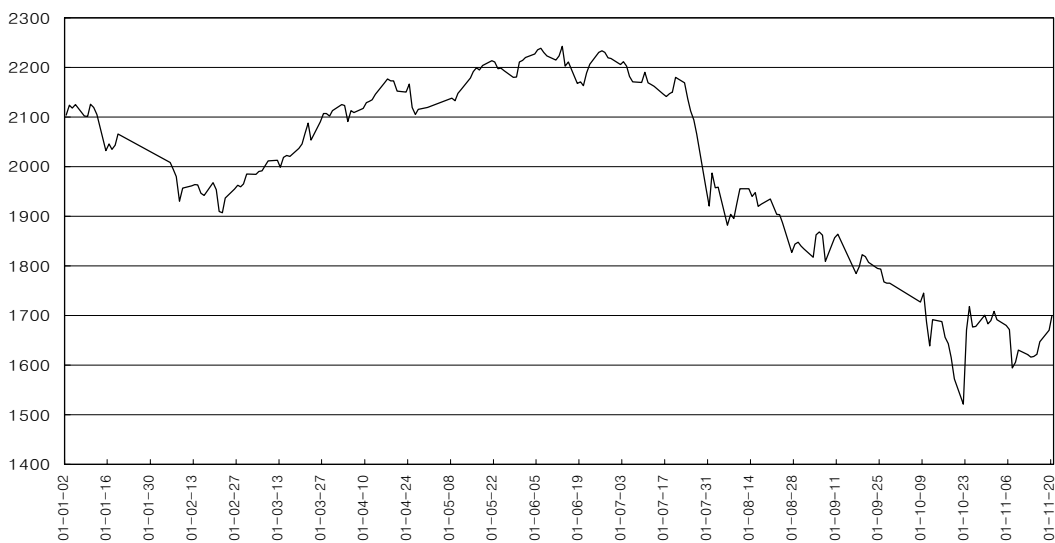
(단위: 억위안)



나. 최근의 주가추이

- 금년 들어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증시의 하락추세를 반영하여 중국의 증시도 하반기에 약 30%정도 조정 양상을 보임. ([그림 4] 참조)

[그림 4] 2001년 중 상해거래소 지수(SSE Composite Index)



- 특히 법인주와 국가주의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증시에 공급초과현상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주가가 하락함.
- 그러나, 2001년 10월 22일 상기정책의 시행을 일시 연기한다는 발표로 주가가 10%이상 재상승

□ 주식시장의 거품 가능성

- 최근 PER은 40~50으로 자산가치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상장기업의 유통주식은 전체의 1/3에 불과
 - 주민저축 대비 투자수단이 제한되어 있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
- 그러나, 당분간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
 - 정부의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커서 증시 침체시 유무형자원을 상장회사에 투입할 여력 충분 (정부가 시장조성)
 - * 실제로 북경시의 한 상장기업의 주가가 폭락하자 북경시는 동기업의 명칭을 중관춘으로 바꾸었음. (중관춘이라는 브랜드 소유자는 북경시)
 - 주식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투자자금이 많음.
 - 해외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가능성

다. 중국 증권시장의 구조

□ A주와 B주의 구분

- A주는 내국인만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고 B주*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거래할 수 있는 주식

- * 원래 B주는 외국인만이 거래할 수 있었음.
- 2000년말 현재 상해증권거래소에는 현재 A주가 559종이고 B주는 55종이 상장되어 있음.
- 42개 회사는 A주와 B주를 모두 발행하고 있고 13개 회사는 B주만으로 상장
- 현재 B주의 거래비중은 A주의 약 1/100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함.
- A, B주의 통합*이후 외국인만 돈을 벌었다는 인식이 팽배
 - * 현재 A, B주의 통합은 내국인에게 B주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A, B주의 완전한 통합은 외환관리법의 개정이후에 가능
- 금년초 중국의 증시가 강세를 보인 주요한 원인은 B주에 대한 내국인 투자개방이었는데 이러한 조치로 대량의 B주를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이 주가상승시 주식을 처분

□ 주식거래제도

- 매매시: 거래세 0.35%, 수수료 0.3~0.4%를 부과
- 1일 가격제한폭: 10%
 - ST(Special Treatment) 주식: 기업의 재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기업으로서 주당 순자산이 1원(액면가) 이하이거나 2년이상 적자기업을 ST기업으로 선정하여 가격제한폭을 5%로 제한
 - PT(Particular Transfer) 주식: 3년이상 적자기업을 PT로 분류하여 매주 금요일에만 거래 허용
 - 4년이상 적자기업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금지하고 장외거래만 허용
 - ST, PT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이 인기*가 있음.
 - * 이는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거의 없는데 기인하는데, ST,

PT로 분류된 기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기 때문임. 실제로 거래소에서 퇴출되어도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 다른 사업(예: 섬유 → IT기업)으로 탈바꿈하여 재상장됨.

□ 주식시장 참여자

- 주식보유액 기준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90.6%정도이나
 - 기관투자자도 개인투자자로 위장하여 거래하고 있으므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이보다 낮을 것임.
-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가능여부는 다음과 같음.
 - ① 기업: 2000년에 국유기업에게도 주식시장 참여 허용
 - ② 투자기금: 폐쇄형 mutual fund 허용. 개방형 mutual fund는 실험중
 - ③ 신탁회사: 신탁회사는 신탁업무보다는 증권업무에 거의 치중
 - ④ 투자공사, 투자관리공사: 사모자금을 운영하며 그 자금출처는 정부, 기업, 사업단위, 개인, 학교 등으로 매우 다양함.
 - ⑤ 보험회사: 직접매입이 불가능
 - ⑥ 양로기금: 불허
 - ⑦ 은행: 직접 매입 불가능하나 call 시장을 통하여 참여. (은행이 증권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자에게 대여하고 기관투자자는 대신 투자)
- ※ 최근 주식시장의 거품이 위험하다는 배경에는 은행 자금의 증시유입이 많기 때문임.

라. 중국 증권시장의 전망

□ 상해증권거래소의 경쟁력 제고 정책

- 중국정부는 홍콩의 중국반환 직후 홍콩을 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려 하였으나 최근에는 상해에 주력하고 있음.
- 상해의 경우 배후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역량이 큰 것으로 평가됨.
- 상해는 주식시장의 대외개방보다는 은행업무의 개방을 우선시하는데 이유는 주식시장의 개방은 위험이 크기 때문임.
- 외자기업의 상장도 검토되고 있으나 시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CHASDAQ

- CHASDAQ 시장은 심천증권거래소에 설치될 예정
- 심천증권교역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상해증권거래소로 이관
- CHASDAQ 개장을 대비하여 작년말부터 심천증권거래소에는 신규 상장회사가 없음.
- CHASDAQ에서는 국유주, 법인주의 구별없이 모두 유통될 것임.
- 외국인도 이미 CHASDAQ상장 예정기업의 주식을 상당분 매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 CHASDAQ의 개장 연기
- 당초 계획은 2001년 6월 개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무기한 연기된 상황으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 세계적인 경기와 증시의 침체

- * 거래소시장에 만연한 내부자거래, 부패 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
- * 등록대상기업을 첨단기술산업에서 성장형산업으로 개념을 전환

※ 첨단기술산업의 경우 중국과학원의 기술인증이 필요한데 이과정에서 rent-seeking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현정부(2003년 교체)에서 CHASDAQ의 개장은 어려운 상황
- * 중국내 학자들은 CHASDAQ의 조기개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들자신이 CHASDAQ등록 예정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3. 홍콩의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역할

□ 홍콩은 중국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으나 향후 그 지위는 약화될 전망

○ 1999년까지 홍콩의 대중국 누적투자금액은 1560억US달러로 이는 전체 중국에 대한 투자액의 51%에 상당

• 약 12만개에 달하는 중국의 기업이 홍콩의 직접투자와 관련이 있고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광동성에 위치

○ 1999년 한해동안 중국의 총외국자본유입액 중 약 40%가 홍콩자본으로 이전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두 번째 투자국인 미국의 경우 점유율이 10%로 급상승 중인데 이는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라 홍콩을 경유하기보다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

□ 홍콩은 우량중국기업의 직접자금조달시장이기도 함.

○ 홍콩거래소에는 H구로 구분되는 중국기업전용 주식시장이 있음.

• 1993년 7월 청도맥주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51개의 초우량 중국기업이 상장되어 중국본토 외에서 자본을 조달

• 원래 거래단위가 홍콩달러였으나 금년 5월21일부터 H구의 화폐단위를 홍콩달러와 US달러 중 선택할 수 있게 됨.

○ 기관투자가로서 그리고 시장조성자로서 상해 및 심천증권거래소(B구)에 자본과 전문성을 제공

II. 일본의 금융구조개혁

1. 일본의 금융구조개혁과 공적자금 투입현황

-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처리는 대부분 금융업계 내의 상호원조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음.
 - 조만간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은행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낙관한데다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킬 경우 예금인출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
 - * 예금보험기구 등의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금융기관의 흡수합병,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등 상호원조방식으로 처리
 - 그러나 일본 최초의 대규모 금융기관 도산 사건이었던 1996년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 연쇄도산 이후 일본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퇴출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
- 1998년 '금융기능안정화긴급조치법'의 제정으로 공적자금이 조성되고 부실징후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음.
 - 1998년 10월 금융재생관련법안의 제정·시행 이후에는 공적기관인 금융재생위원회가 파탄처리 방식을 확정토록 개선
 - * 파산관재인에 의한 경영·재산관리, 공적 가교은행(승계은행)의 설립, 특별공적관리(일시 국유화) 등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
- 1998년부터 일본이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조성한 공적자금은 총 70조엔임.
 - 1998년에 30조엔을 조성한 후 1998년 10월에 60조엔으로 조성규모를 확대하였고 2000년 5월에 다시 10조엔*을 늘린 70조엔으로 조성규모를 확대
 - *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조성액을 17조엔에서 27조엔으로 10조엔 증액

- 예금보험기구는 금융재생위원회(2001년 1월 6일 폐지, 금융청으로 업무이관)의 결정에 따라 공적자금을 조성·집행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처리
- 예금보험기구가 관리하는 공적자금(70조엔)은 정부 교부국채(13조엔) 및 일본은행, 민간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정부보증부 차입금(57조엔)으로 조성

□ 조성된 공적자금 중에서 사용금액(2001년 1월 현재, 잔액기준)은 총70조엔의 약 35%인 24조 6,586억엔임.

-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조성된 자금(일반계정, 특례계정)은 총 27조엔인데, 이미 1/2 이상이 사용되었음.
- 대형은행의 파산이 금융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금융재생계정)은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 등에 투입
-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금(조기건전화계정)은 도시은행 등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수 차례에 걸쳐 투입되었음.

<표 4> 일본 예금보험기구의 공적자금 사용

(2001년 1월말 현재, 잔액기준, 단위: 억엔)

| 계정구분 | 용도 | 집행한도 | 정부보증 사용액 |
|-------------|-----------------------------|---------------|-----------------|
| 일반계정 | 예금보험금 지급 | 40,000(정부보증) | 20,612 (51.5%) |
| 특례계정 | 부실자산 매입정리 | 100,000(정부보증) | 38,787 (38.8%) |
| | | 130,000(교부국채) | 78,275 (60.2%) |
| 금융재생계정 | 특별공적관리기관 및 가교은행 지원 | 180,000(정부보증) | 39,403 (21.9%) |
| 조기건전화 계정 | 금융기관 자본확충 등 건전화 조치 지원 | 250,000(정부보증) | 69,509 (27.8%) |
| 합계 | | 700,000(정부보증) | 246,586 (35.2%) |

주: 잔액기준이므로 기투입액 중 상환금은 사용액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일본 금융청, 한국은행, 재경부 공적자금관리백서(2001년) 등.

□ 일본의 국가채무가 GDP의 130%에 달하는 등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미 조성하기로 한 공적자금(정부보증 자금)의 실제 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반면, 금융권 부실채권이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행, 금고, 신탁 등의 부실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공적자금의 투입 및 재원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기 투입된 공적자금도 주로 출자, 출연, 자산매입으로 사용되어 회수 실적이 미진한데,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변제 등으로 극히 일부가 회수 되어 회수율은 17.5%에 불과

<표 5> 금융구조조정 자금의 투입 및 회수 내역

(2001년 3월말 현재, 단위 : 억엔)

| 구 분 | 세부내역 | 금 액 |
|-----|---------------|----------------------|
| 투 입 | 부실기관 정리자금 | 271,273 |
| | 금융기관 조기건전화 자금 | 84,213 |
| | 금융안정화 자금 | 18,156 |
| | 합 계 | 373,642 |
| 회 수 | 금융기관 자진변제액 등 | 46,647 |
| | 정리회수기구 회수금액 | 18,892 |
| | 합 계 | 65,539 (회수율 : 17.5%) |

자료: 일본예금보험기구연보, 2001. 재정부 공적자금관리백서(2001년 7월)에서 재인용.

2. 일본의 금융구조개혁에 대한 국제적 평가

□ 1998년 이후 대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등 그 동안의 은행구조조정으로 일본의 은행 중 BIS 자기자본목표비율에 미달한 은행은 거의 없는 상태

○ 국제기준을 적용받는 26개 은행 모두가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음.

- 또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경영건전화 계획 추진으로 경비가 절감되고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금융구조개혁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임.

(부실채권 처리 지연)

- 일본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경기침체 및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부실채권 정리 실적마저 저조하여 다시 증가하는 추세
 - * 2001년 3월말 현재 전국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32.5조엔으로 2000년 3월말(30.4조엔) 대비 2.1조엔 증가
 - * 그러나 부실채권 처리실적은 1998년중 13.6조엔, 1999년중 6.9조엔, 2000년중에는 6.1조엔으로 감소하는 추세
- 일본은행은 일본의 부실채권 정리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은행들의 낙후된 지배구조로 주주들의 부실채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고, 현행 금리수준이 제로에 가까워 부실채권 보유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시장할인율이 적용되는 부실채권 매각을 주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신규 부실채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등 여신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신용경색(credit crunch) 현상이 발생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체제 구축 미흡)

- 일본 금융당국도 공적자금 투입시 제출한 경비절감 등의 경영건전화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기관간 합병을 유도
 - *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은행(major bank)으로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인 합병 및 통합을 통한 대형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그러나 합병시 화학적 융합이 어려운 점 등 일본의 독특한 기업문화로 인해 은행업 재편이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자회사로 통합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으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자회사간 업무조정, 전문화 및 구조조정이 쉽지 않음.

(구조조정 비용 증가)

- 기업구조조정 부진으로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여 은행경영이 다시 압박되는 악순환 초래
 - * 기업구조조정 부진은 부실채권 추가발생 → 은행 경영악화 → 신용경색 발생 → 경기부진 → 부실채권 추가발생으로 이어져 금융구조조정 비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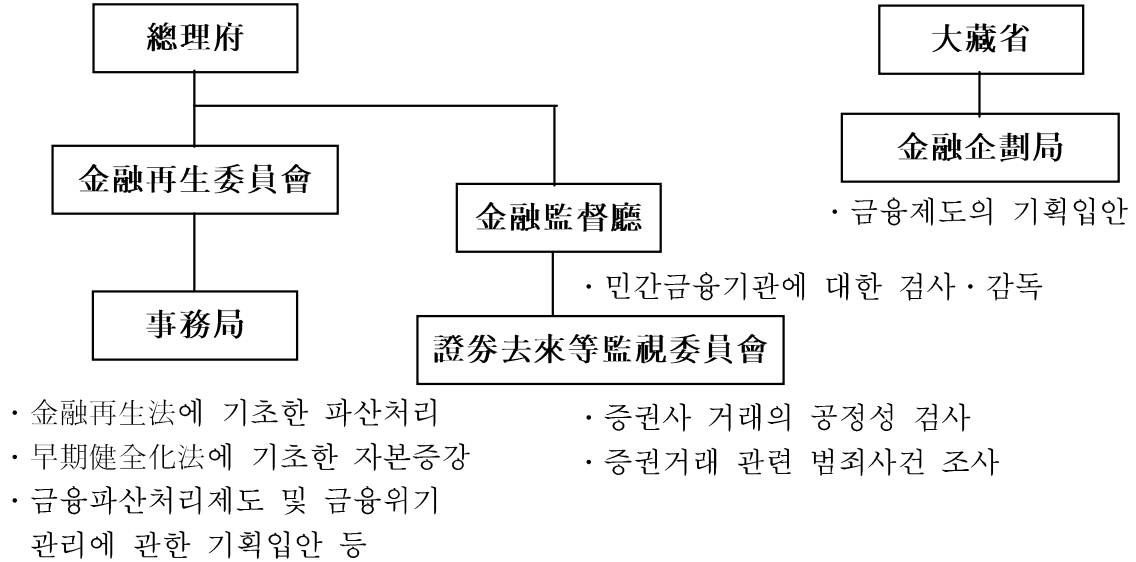
(낙후된 은행지배구조)

- 일본의 은행들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차주기업, 은행종업원 및 여타은행 등 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이 주식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주주의 은행경영에 대한 영향력 미흡
 - * 은행경영층에 대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결여는 은행경영층으로 하여금 주주의 수익극대화보다는 시장점유율 증대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부실발생 가능성 증가
- 한편,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일본 은행의 고위간부들은 정부가 아직도 금융구조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 금융청이 최근 외국인 투자자 소유가 된 신세이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요구
 - 이에 대해 은행경영에 '이윤극대화'라는 서양 개념을 도입하려는 동 은행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의욕을 저해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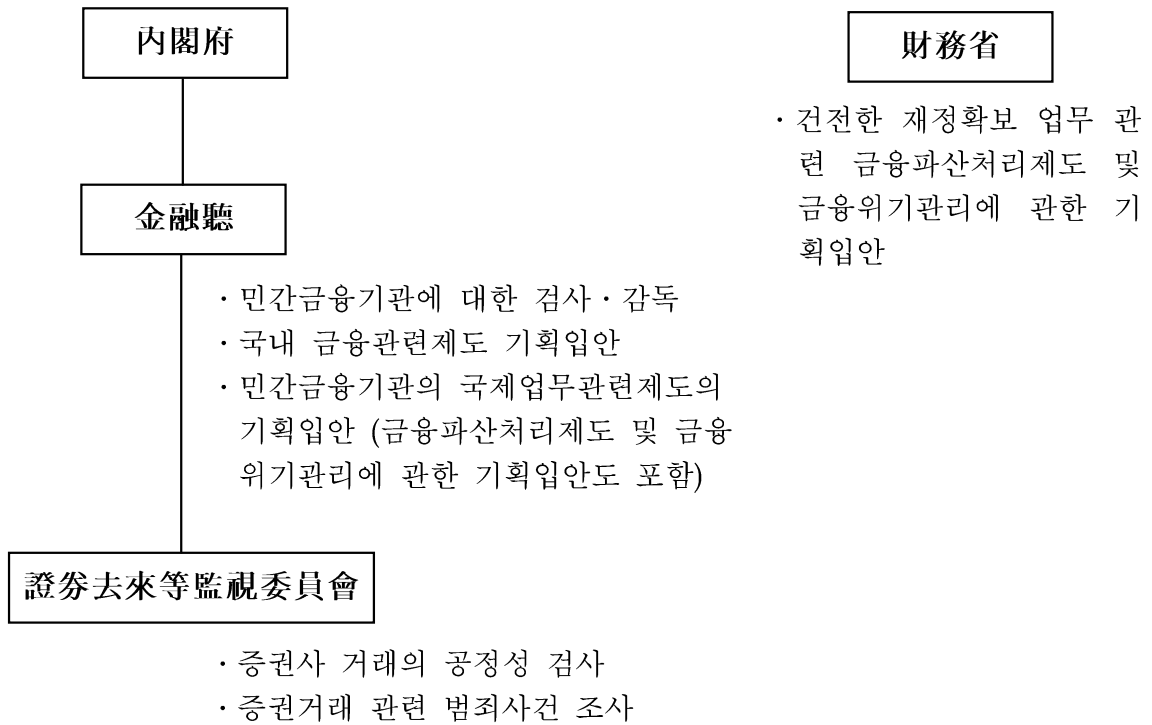
3. 일본의 금융감독시스템과 정부의 금융개입

- 1998년 이전의 일본 금융감독업무는 대장성(본부) 및 지방재무국(대장성의 지방분국) 및 일본은행 등으로 3원화되어 있었음.
 - 대장성은 감독정책 입안, 금융기관 인허가 등 감독·검사업무를 총괄
 - 지방재무국 및 일본은행은 주로 금융기관 검사 관련업무를 담당
- 금융빅뱅이 전개되는 가운데 1998년 12월 금융감독 권한의 상당부분을 총리실 산하의 금융재생위원회와 금융감독청으로 이관
 - 대장성의 금융기획국은 금융제도 및 증권거래제도의 조사·기획·입안 등을 담당
 -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와 금융기관의 감독·검사업무 등은 금융재생위원회와 금융감독청이 수행
- 2000년 7월 금융감독청과 대장성 금융기획국을 통합하여 금융청을 설립
 - 금융청은 금융재생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금융청의 長은 長官
 - 금융기관의 감독·검사 등 집행부문과 법·제도의 기획입안부문 등을 총괄
- 2001년 1월 금융구조조정의 전담기구였던 금융재생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청을 내각소속 외청으로 개편
 - 금융재생위원회가 담당하던 사무까지 이관 받음
 - 대장성은 재정부문만 장관(2001년 1월부터 재무성으로 명칭 변경)하게 되어 재정·금융정책 기능이 분리되었으나, 금융기관 파산처리 및 금융위기관리 관련 업무는 금융청과 공동 관할

[그림 5] 감독체제 개편 이전



[그림 6] 감독체제 개편 이후



□ 일본은행과의 관계

-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고사(考査)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감독당국은 아니므로 감독이나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 일본은행은 신용질서의 유지 및 자금결제의 원활화관련 업무의 고사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고사에 관한 계약 체결 가능
- 일본은행은 고사업무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파악 및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 지도업무 수행
 - * 고사결과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권한이 없으며, 조치는 금융청의 소관임

□ 「금융위기대응회의」를 통한 상호협조

- 총리(의장), 재무대신, 금융청담당 국무대신, 금융청 장관 및 일본은행 총재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내각부에 설치
- 금융기관의 대규모 연쇄부실 등 금융위기 대응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일본 금융감독 시스템의 장점으로서는 여타 정부부처와의 원활한 정책협조체제 및 정부 내에서의 독립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임.

- 정부부처내의 조직으로 타부처와의 이견 등 마찰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금융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한 협조가 가능
- 한편으로는 정부부처에서도 재무성이 아닌 내각부에 소속되어 있어 타부처의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여타 경제정책에 대한 종속된 개념이 아닌 독립적인 정책집행이 가능

□ 그러나 정치권으로부터의 간여 소지가 크며, 참신하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도 제기되고 있음.

- 담당대신 및 금융청 장관 등이 내각부 소속으로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정부공무원의 급여로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재무성의 내락없이 인사진전이 못하여 참신한 인물의 확보에 어려움.

4. 부실채권정리 전망과 문제점

□ 2000년 3월말 현재 일본의 전국은행(도시+신탁+장기신용+지방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총 32.5조엔으로 1998년 3월말(29.8조엔) 대비 2.7조엔 증가

* 일본은 부실채권 분류기준을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준으로 강화하여 산출한 리스크관리채권(파탄거래처채권 + 연체채권 + 3개월이상 연체채권 + 대출조건 완화채권)을 1998년 3월말 결산기부터 공표

- 총대출금에 대한 부실채권비율은 2001년 3월말 현재 6.6%로 1998년 3월말(5.4%)에 비해 1.2%포인트 상승
- 대손충당금에 의한 부실채권커버율은 2001년 3월말 현재 35.5%로 1998년 3월말(59.7%)에 비해 24.2%포인트 하락

<표 6> 전국은행의 부실채권 추이

(결산기 기준, 단위 : 조엔, %)

| | 1998.3말 | 1999.3말 | 2000.3말 | 2001.3말 |
|--------------|---------|---------|---------|---------|
| 부실채권(A) | 29.8 | 29.6 | 30.4 | 32.5 |
| 대손충당금(B) | 17.8 | 14.8 | 12.2 | 11.6 |
| 총대출금(C) | 553.1 | 506.6 | 496.2 | 494.2 |
| 부실채권비율(A/C) | 5.4 | 5.8 | 6.1 | 6.6 |
| 부실채권커버율(B/A) | 59.7 | 50.0 | 40.1 | 35.5 |

주 : 1999년 3월말 이후 규모에서는 國民, 幸福, 東京相和, 나미하야, 新潟中央, 長期信用, 債券信用銀行이 제외됨. 단, 2000년 3월말 이후 규모에는 長期信用銀行이 포함되며, 2001년 3월말 규모에는 債券信用銀行을 포함.

□ 전국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누계액을 기준으로 본 부실채권 처리규모는 최근 감소세를 지속함.

- 최근 3회계년도 중 부실채권 처리규모는 1998회계년도에 13.6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99회계년도에는 6.9조원으로 감소한 후 2000회계년도에는 부실채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3조원으로 크게 감소

<표 7> 전국은행의 부실채권 처리현황

(단위 :억엔)

| | 1998.3말 | 1999.3말 | 2000.3말 | 2000.9말 |
|------------------------|---------|---------|---------|---------|
| 부실채권 잔액 | 297,580 | 296,270 | 303,660 | 325,150 |
| 부실채권 처리액 ¹⁾ | 132,583 | 136,309 | 69,441 | 61,079 |
| 1992년이후 누계 | 451,351 | 587,660 | 657,101 | 718,180 |

주 : 회계년도(직전년도 4월부터 당해년도 3월까지) 중 처리액

□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기업 증가,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적용 등으로 부실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통, 부동산, 건설업 등 낙후부문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도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잠재부실채권이 표면화될 경우 부실채권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0%대인 낮은 금리수준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은행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데다 은행들이 원금을 상환받기 보다는 대출을 대환하는 방법을 선호함으로써 많은 부실채권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음.

*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부실채권규모는 64조엔 (대출금의 약 13%) 수준이며, 금융권 전체 부실채권규모가 공식적으로는 150조엔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Goldman Sachs는 최고 230조엔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Economist지, 2001년 10월 13일자)

- 단, 최근 재편된 대형은행들이 크린(clean)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부실채권 처리가 가속화될 전망
- 한편, 최근 일본 금융청은 대형은행 부실채권잔액을 2004년말까지 2000년말(18조엔)의 2/3 수준(12~13조엔)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실채권정리 가속화 방안을 발표
 - 대형은행의 부실채권정리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 일본 수상이 국회에서 “늦어도 3년 이내에 은행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른 조치
 - * 2007년말 대형은행 부실채권 최종 목표는 7~10조엔 수준임.
 - 동 방안에 따르면 대형은행 부실채권비율이 5%대(2000년)에서 3.5~4%(2004년)으로 감소할 전망
 - * 미국 은행 평균 부실채권비율(2000년말) : 1.24%
-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은행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방안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대형은행들의 기본자본(Tier 1)은 공식적으로는 23조엔이지만, 주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5조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신규발생 손실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
 - 따라서 부실채권을 반감시키는데 7년이나 걸린다고 전망되는 것은 현존 최종처리안이 불철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실채권을 시간을 갖고 처리한다는 사고는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 (일본 경제학자들의 「금융시스템재건 긴급제언」, 일경금융신문, 2001년 10월 5일자)

5. 일본과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비교

-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을 일본보다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잠재부실의 상당부분이 현재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실채권의 처리가 전반적으로 앞선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2001년 3월말까지 총 113.3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는데, 1997년말 총여신대비 21.3%로서 일본(1997년 3월말 총여신대비 11.6%)에 비해 큼.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추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총 487개의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여 정리기관수가 일본(142개)의 약 3.4배임.
-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를 2000년 명목GDP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약 26%로서 일본(1999년 명목GDP대비 공적자금 조성규모 : 약 14%)보다 크게 높은 수준
 - 일본의 경우 70조엔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실적은 24조엔에 불과
- 은행간 자발적인 합병 및 통합에 의한 은행업 재편추이를 살펴보면,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일본이 크게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 등장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등 4대 대형 금융그룹의 총자산 규모는 세계 5위권 이내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최대 금융그룹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세계 90권에 불과
 - * 한국은행,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에서 인용

Ⅲ. 동북아 금융협력체제 구축 관련 이슈

1. 아시아 통화기금(AMF)

- 배경: 1997년 당시 일본 대장성차관인 사카키바라가 아시아지역 금융 및 통화불안을 줄이기 위하여 AMF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재무부와 IMF의 반대로 무산
 - 원안에는 일본이 제공한 구제금융은 일본제품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등 쉽게 국제적 공감을 얻기 어려웠음.
 - 중국은 역내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여타 동남아 각국은 이에 동조
 - 1998년 미야자와 대장상이 AMF 검토 필요성을 제기
- 하지만 통화위기가 발생하면 그 타격이 역내 주 교역국에게는 빨리 전파되지만 역외로는 잘 전파되는 않아 지역적 차원에서 통화위기 전파를 차단할 유인이 있음.
 - 대부분 국가들의 역내 교역비중이 역외 교역비중보다 훨씬 큼.
 - 자본시장개방으로 통화위기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음.
- 통화위기의 지역화현상은 1992년 핀란드에서 시작한 북구삼국 외환위기,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1997년 태국에서 시작한 동아시아 외환위기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
- 통화위기 극복 목적으로 조달된 구제금융도 지역화 현상을 나타냄.
 - 미국과 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체결되어 역내 교역이 활성화 된 것이 멕시코 외환위기 때 미국이 구제금융을 제공한 주 이유가 될 수 있음.

- 유럽통화통합(EMU)에서는 외환위기로부터 유럽시장보호가 통화통합의 주목적의 하나임.
- 아시아에서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IMF로부터의 직접적인 구제금융 규모가 쌍무간 현상을 통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음.
- 아시아 통화기금설립자본금으로 1,000억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역내 외환보유고가 현재 1조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자본금 조달은 크게 문제 될 수 없을 것 같음.
- 현재 중국, 타이완, 일본 및 한국이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국제금융이슈에 공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AMF의 설립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하지만 AMF 설립에 아시아국가들만 참여한다면 일본, 중국(또는 한국) 중 어느 나라가 지도적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북미와의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큼으로 미국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
- AMF가 설립되면 IMF와 경쟁관계가 될 수 있어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글로벌기구와 지역기구가 상호 협조하는 국제관계의 예로,
 - UN주도 안보체제와 NATO 안보체제, World Bank와 Asian Development Bank 등을 들 수 있음.
- IMF와 AMF와의 보완적 관계 설정 이슈
- IMF의 주기능의 하나는 경제상황감독(Surveillance)인데 이 부문은 현재 OECD에서도 하고 있고 Moody나 S&P 등 국제신용조사 기관에서도 하고 있음.

- AMF가 설립되면 역내 경제상황에 주력할 수 있어 IMF의 기능을 더욱 보완할 수 있고
- AMF가 역내외환위기의 조기경보체제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에 큰역할을 할 수 있음.
- * 아시아지역의 경제규모에 비해 IMF 쿼터가 적어 IMF 자금지원만으로 경제위기 해소가 어렵고 국제투기자본의 규모가 1개국의 외환관리능력보다 훨씬 큰 문제들도 AMF의 설립에 긍정적인 요인이 됨.

□ IMF의 더욱 중요한 기능은 구제금융 제공시 정책준수조건(IMF Conditionality)을 제시하는 것임.

- 현재까지 구제금융은 IMF가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 AMF가 IMF보다 구제금융을 더욱 쉽게 제공한다면 도덕적 해이문제를 초래하여 금융위기가 발생한 나라의 거시정책수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금융구조조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AMF의 설립에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 좀더 나은 지역통화기금 운영에 관한 문제이고 구제금융제공시 IMF와 긴밀한 협조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
- * 그예로 미국이 남미 구제금융제공시 IMF와 특별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음.

2. 동북아 개발은행

- 설립목적은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동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있음.
-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이 진전되면 북한의 경제개발 비용중 한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동북아 개발은행의 성공여부는 중국 시베리아의 천연자원개발과 동지역의 경제성장이 얼마만큼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지 또 출자국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음.
- 하지만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는한 새로운 공적개발은행의 필요성에 의심이 감.

3. 일본자금이 중국에 진출 할 가능성

- 일본의 아시아 직접투자 총액이 1999년 8천억엔에서 2000년 6천6백억엔으로 감소하였지만 중국에의 직접투자 총액은 8백억엔에서 1천1백억엔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아시아 직접투자 총액중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동아시아 외 환위기 그 중요도가 11% 미만으로 줄어들었지만 다시 증가하여 현재는 17%에 달하고 있음(<표 8> 참조).

<표 8> 일본의 아시아에의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지위

(단위: 건, 억엔, %)

| | 1998년도 | | | 1999년도 | | | 2000년도 | | |
|-------|--------|-------|------|--------|-------|------|--------|-------|------|
| | 건수 | 투자액 | % | 건수 | 투자액 | % | 건수 | 투자액 | % |
| 중 국 | 112 | 1,363 | 16.3 | 76 | 838 | 10.5 | 102 | 1,099 | 16.8 |
| 홍 콩 | 51 | 770 | 9.2 | 75 | 1,083 | 13.6 | 51 | 1,034 | 15.8 |
| 태 국 | 72 | 1,755 | 21.0 | 72 | 910 | 11.4 | 61 | 1,029 | 15.7 |
| 한 국 | 47 | 387 | 4.6 | 62 | 1,093 | 13.7 | 52 | 899 | 13.7 |
| 대 만 | 27 | 287 | 3.4 | 26 | 318 | 4.0 | 51 | 563 | 8.6 |
| 필리핀 | 45 | 485 | 5.8 | 31 | 688 | 8.6 | 41 | 506 | 7.7 |
| 싱가포르 | 58 | 815 | 9.8 | 49 | 1,073 | 13.4 | 23 | 468 | 7.1 |
| 인도네시아 | 62 | 1,378 | 16.5 | 57 | 1,024 | 12.8 | 25 | 457 | 7.0 |
| 말레이시아 | 32 | 658 | 7.9 | 44 | 586 | 7.3 | 23 | 256 | 3.9 |
| 기 타 | 31 | 459 | 5.5 | 36 | 376 | 4.7 | 19 | 242 | 3.7 |
| 아시아 계 | 537 | 8,357 | 100 | 528 | 7,988 | 100 | 448 | 6,555 | 100 |

資料: 財務省 Homepage

